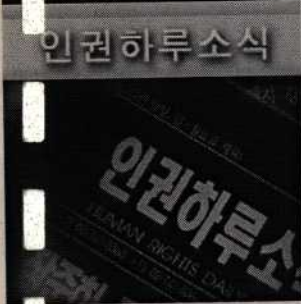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03일 (화)  
제 26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파병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
  2. "노무현 아저씨가 정말 미워요"
  3.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4.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5.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 "파병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

### 학생·사회단체, 자이툰 부대 앞 밤샘농성

추가파병부대인 자이툰 부대가 3일 이라크로 떠날 예정인 가운데 학생·사회단체들의 투쟁이 뜨겁다.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견고, 밥을 굶고, 밤샘 농성을 하는 이들의 간절한 의침은 파병 철회이다.

"파병 안돼, 절대 안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소속 500여 명의 사람들은 2일 오후 4시 경기도 광주 특전 교육단 자이툰 부대 앞에 모여 정부의 파병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파병부대가 있는 이곳까지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국 파병의 날, 치욕의 날이 오고야 말았다"며 "자주,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파병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최중수 신부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군대가 해방군입니까 침략군입니까"를 물은 뒤 "만약 이라크가 재건되어서 독립기념관이 세워진다면 부시와 노무현은 나란히 침략자로 전시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죽음을 부르는 한미동맹 거부'가 앞뒤로 적힌 붉은색 전단을 흔들며 한 목소리로 파병 철회를 외쳤다. 또 "태극기 덮혀 들어올 관들을 바라지 않는다"는 등의 피켓으로 파병이 가져올 비극을 경고하기도 했다. 집회가 끝나갈 무렵에는 참가자들이 모두 길을 막고 누워 "이라크 파병을 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고 소리치며 시위를 벌였다.

### 200여 명, 자이툰 부대 앞 밤샘 농성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자이툰 부대원들에게 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부대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소화기를 뿌리는 등 한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1시간여 동안의 실랑이 끝에 경찰의 저지선이 풀리면서 참가자들은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대 정문 앞까지 진입했다.

3일 오전 7시 자이툰 부대가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한다는 일정에 따라, 이들은 부대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갖고 밤샘 농성을 한 후, 새벽 4시부터 서울 공항으로 이동해 파병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 각계 각층, 파병 철회 한 목소리

이미 광화문 열린 공원에서 민주노동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해 수십 명의 사회 각계 대표들이 파병 철회를 요구하며 10만인 릴레이 단식농성을 11일째 하고 있다. 또한 2일 오전 11시에는 반전평화기독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등 종교인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파병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병국들의 철근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기어이 파병을 강행한다면 전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로부터 침략국가로 낙인찍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하다.

<기사 처음으로>

## "노무현 아저씨가 정말 미워요"

### '파병반대 도보순례단', 평화의 노래로 서울시민들 만나

"걷다보면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 덜 힘들어요"라며 김범 어린이는 온몸을 녹일 듯이 뜨거운 햇빛에 몸을 맡긴 채 한 걸음, 한 걸음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24일 부산을 출발해 대구, 경산, 거창, 광주, 천안, 대전을 거친 '이라크 파병반대 전국도보순례단'은 31일 서울에 도착, 시민들과 함께 반전평화'를 노래했다.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태평양전쟁피해자, 고엽제피해자 등 전쟁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한 이날 순례에는 벌써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전쟁의 부당함을 알렸다.

대구에서 왔다는 한재경(초등 2) 어린이는 "이라크파병에 반대하려고 왔다"며 "이라크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전쟁은 정말 나쁜데, 왜 우리가 참가해서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또박또박 말했다. 의왕에서 온 김범 어린이도 "전쟁을 말하면 '살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리에서 평화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자연파괴에 반대하며 '천성산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도롱뇽의 친구들'도 "도롱뇽도 생명을 원해요, 도롱뇽도 전쟁에 반대해요"라는 선전물을 들고 순례에 참가했다. '도롱뇽의 친구들' 이영경 사무국장은 "모든 생명을 살리자고 하는 천성산 살리기 운동과 학살과 총으로 대변되는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은 모두 생명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서울순례에는 참가자들이 색다른 방식으로 참가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차도르를 쓴 여성, 베트남 전통의상을 입고 꽃이 꽂힌 총을 든 사람, '평화의 꿈'을 글리며 행진에 참가한 사람 등 참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시민들을 만났다. 집회와 행진에서도 발언과 구호보다는 평화의 노래가 더 많이 울려 퍼졌다.

"내 손자가 죽는다, 파병을 멈춰라"라는 노래를 부를 때에는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번 순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부르기 위한 노래를 준비했다는 '별음자리표' 씨는 "다양한 집회의 형식이 필요하다고 느껴 순례에 참가하게 됐다"며 "노래가 구호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시민들의 호응을 보면서 새로운 형식에 대한 긍정성을 발견하게 됐다"고 전했다. 별음자리표 씨는 열린 우리당 앞에서 진행되는 '파병반대 널린 노래방'도 이런 맥락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도보순례단은 영등포역을 출발해 열린우리당 당사와 국회, 신촌, 시청앞 광장을 지나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도보순례단 최봉대 단장은 마지막 순례지인 광화문 앞에서 "파병반대 순례는 광화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파병이 철회될 때까지 평화의 발걸음을 계속 디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창원지법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는 2일 하모 씨 등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집시법 개악으로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앞 집회 금지 조항은 집시법 제11조 4호로 다시금 건재하게 됐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1. 파병철회 위해서 가릴 것이 없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파병반대' 단식농성 이어가(7.23~8.2)/ 성노예피해자, 강제징집자 등 파병반대 도보행진단, '파병반대 전쟁반대' 부산에서 출발 전국을 거쳐 서울 입성... '평화가장행렬' 진행(7.24~31)

2. 바로 지금, 과거청산에 쫓겨들!

한나라당, 의문사진상규명법과 친일진상규법 개정예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과거청산 발목 잡기(7.26)/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열린우리당 발표와 관련해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가져, 안 의원 "대통령이 사상논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의문사위원회의 국회 이관을 검토중이다"... 인권사회단체 "정치적 부담 변명 말고, 반역사적 세력과 정면승부해라" 촉구(7.28)/ 인권사회단체, "과거청산 발목 잡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열고 대오각성 요구(7.30)/ 2기 의문사위원회 대통령보고, 노 대통령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 강조(7.30)

3. 주목할 만한 판결

인천지방법원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 "우리사회 혼인은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며 "동성에 혼인 인정 못한다"고 판결(7.27)...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비난(7.29)/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선고(7.29)/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표현물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에 대해선 무죄 판결(7.29)

4. 기타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인권평화단체, 정부에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을 요구(7.26)/ 장애인교육권연대 7개 요구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합의... 23일(단식 19일) 만에 농성 접어(7.27)/ 동남아에 머물던 탈북자 460여명 서울도착... 북, 강하게 항의(7.27~29)/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의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농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려(7.27)/ 주한미국대사관, 8월말부터 미국방문 한국인의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발표... 인권단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며, 테러방지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7.30)/ 참여연대, 롯데리아·맥도널드·버거킹·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 업체 4곳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7.30)/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기본골격(오시마안) 초안 승인(7.31)

<기사 처음으로>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8월 10일자부터 새로운 필자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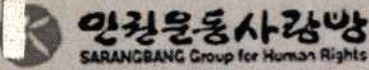
- 범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은종복(풀무질 일꾼)
- 지음(진보네트워킹 활동가)
- 김정인(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04일 (수)  
제 26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
  2.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3.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 <논평>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

정부가 기어이 침략군을 또다시 이라크로 파견했다.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해서"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더니 국민들에게 쉬쉬하며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강행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말라며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에도 전국을 견고, 폭기를 끊고, 밤을 새우던 민중들의 간절한 외침은 목살 당했다. 평화를 노래하는 아이들의 재갈거림과 이라크 민중들의 평화를 향해 모은 두 손은 무참히 짓밟혔다.

더욱이 이라크 민중들에게 군대는 해방의 손짓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이 시작되고 1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다. '해방'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이라크 민중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준 점령군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이제 한국에게도 들려질 것이다.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각 언론사에 이들에 대한 보도를 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나라 정부가 자이툰 부대원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걱정했다면 추가 파병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앞서 파병한 사회·제마 부대까지 철수시켜야 마땅하다. 또한 이라크 저항 세력의 경고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파병은 철회됐어야 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언론 통제를 통해 이번 파병이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빌붙어 이라크 민중의 희생으로 생기는 이익을 챙기려는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더 많은 이라크 민중들이 죽어야 하는가? 얼마나 우리의 젊은이들이 더 죽어 들어와야 하는가? 더 이상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제라도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회·제마 부대와 자이툰 부대를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것만이 장난감이 아니라 총을 들고 복수할 생각을 해야하는 이라크 아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집을 나서야 하는 이라크의 민중들에게 한국이 침략 국가로 기억되지 않는 길이다.

<기사 처음으로>

##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 서울시,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의 취지 왜곡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위해 발의되었던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 관료적, 편향적 자세로 자칫 왜곡 실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울시민 2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급식 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조리종사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신설 등 조례안의 핵심적인 부분을 서울시가 왜곡,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WTO협정을 이유로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에 난색을 보이자, 운동본부 측은



'건강한 학교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의지가 과연 있는냐고 반문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WTO협정의 부속서인 GATT협정의 '내국인대우원칙'은 상업적 재판대 목적이 아닌 정부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협정 자체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서울시가 WTO 협정의 위배 여부를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조달하는 급식 재료를 포함,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급식 재료 역시 미국산 농산물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체에 해를 끼치는 외국산 농수산물도 WTO 등의 국제 기구들과 다국적 기업의 비호 아래, 낮은 가격을 앞세워 식탁을 잠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검토 내용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조례안의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운동본부는 서울시가 학교 급식을 위한 필수적 제한 요건인 시설비 지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조리 종사원의 적정인원수 확보와 고용조건개선을 위한 지원 요구에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비판했다. 조리업 종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이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시설 확보와 인건비 확충 등에 "예산"을 적극 배정하고, 추가 재정 부분의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발의안에서 주민들은 학교급식의 주체가 참여해 급식문제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축소코자하면서 운동본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조례 내용을 그대로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주민 발의의 방식으로 제기되어 직접 민주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급식조례제정운동이 내용적 측면에서 역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처음으로>

##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세계무역기구(WTO) 147개국으로 구성된 일반이사회가 지난달 31일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기본골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어두운 소식이 전해졌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세부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가 전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무산되면서, 위기에 처해있던 WTO의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관세 높은 개도국 농업, 타격 커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농업협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기본골격은 △국내보조금 총액 20% 감축 △관세에 따라 구간을 나눠 관세가 높은 구간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구간별 방식' 채택 △수출보조금 폐지 △특별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을 면제받을 수 있던 혜택 삭제 등을 회원국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 100% 이상 품목이 142개, 300% 이상 품목이 94개에 달하는 우리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개도국에 대한 우대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개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 "추곡수매제 폐지는 농업 포기"

이 합의문이 나온 지 이틀 만인 3일 한국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추곡수매제가 국내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이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은 "전체 농가의 75%가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쌀농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곧 농업 포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류미경 정책기획국장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산업체제 개편에서 농업은 항상 배제되어 왔다"며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 결정은 기본적으로 농업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정부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등 식량자급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공업·서비스업 협상도 선진국 입장 관철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즉 공산품과 관련한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들의 반발로 5차 각료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테르베즈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4개의 '싱가포르 이슈' 중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은 개도국들의 반발로 유보된 상황이고, 수출입 세관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비스협상에서 의료, 교육, 기간산업, 문화, 물 등의 개방과 자유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공공제에 대한 접근과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정부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통한 농업 부문의 심각한 훼손에 대한 언급 없이 '공산품 수출 증가'만을 협상의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칠레 FTA의 경우, 자유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농산품에 대해 일정 정도 양보하더라도 공산품에 있어서는 수출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무역적자가 더 심각해지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드러난 '밀실협상'의 문제는 WTO 협상 절차에 있어서 비민주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농업수출국인 미국, 유럽연합, 브라질, 호주, 인도 등 소위 'G5'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다른 자리를 통해서 협상안을 마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 시켰고, 5차 각료회의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에 대해 유럽연합이 7월 21일 6천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철회함으로써 개도국들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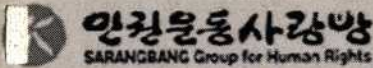
이번 도하개발의제 협상 합의 후 WTO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중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동은 "전세계 민중들은 이번 합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해 열사 1주년인 9월 10일, 국내에서는 노동자·농민의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어 있고, 국제 농민들의 연대체인 비아캄페시나는 이 날을 '국제공동행동의 날'로 선포했다. 자본의 세계화와 더불어 빈곤의 세계화를 강요하는 WTO 협상의 진전과 함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민중들의 저항에 전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05일 (목)  
제 26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경찰,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2. 내전으로 얼룩진 수단 ... 집단학살, 강간, 피난
3.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 경찰,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 서울 경찰청 1078부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주장 ... 경찰 목살

경찰이 대처 중이던 시위대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 후, 청와대를 향해 진압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서울 지방경찰청 특수 기동대 소속 1078부대 중대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시위에 참가했던 전국학생연대회의 (아래 연대회의) 한아름 활동가는 "이 과정에서 밀고 당기던 중 방패들 사이로 틀어 쪼갠 한 중대원이 틈새 아래로 손을 뻗어 연대회의 소속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학생들은 주변에 있던 중로경찰서 정보과 경찰에게 "현행범이므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라"고 요구했으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러 온 게 아니니까 112에 신고하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만 들었다. 더욱이 학생들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청운파출소 이모 경감은 '피해자 나와라'며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무지함을 드러냈다.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1078 중대 김재수 씨는 4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 의혹이)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어제 날씨가 30도를 넘을 정도로 뜨거웠고 중대원들이 가축 장갑을 끼고, 무거운 방패를 들고 있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기에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씨는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약간의 신체적 접촉은 일어날 수 있다"며 여지를 두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성폭력 사건을 목격한 박태우(고려대 학생) 씨는 "피해 여학생이 분명히 거부사를 밝혔으나 성폭력은 계속됐다"며 경찰의 답변을 반박했다. 또한 피해자와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가해자 색출과 사과를 요청하자, 1078 중대 소속 경찰들은 문제를 회피하며 결국 "도망을 가 학생들이 그 뒤를 쫓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담당하다면 왜 도망을 갔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조이여울 편집장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시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이 편집장은 "이러한 행위는 특정 한 남성의 개인적인 욕구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 모멸감을 주어 시위대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조직적 차원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으로 드러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96년 한총련 소속 여학생에 대한 경찰들의 집단 성폭력, 부안 반핵 투쟁 중 장기주둔 경찰력의 일상적인 언어·신체 성폭력 등으로 가시화되었다.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무수하다.

한편, 3일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진정했다. 연대회의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사이에서 남녀간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집회참가자를 위협한 점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1078 부대가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 내전으로 얼룩진 수단 ... 집단학살, 강간, 피난

국제사회, 전쟁범죄 조사 및 인도적 지원 절실



"전쟁도 부자나라와 해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온통 이라크전에 쏠려, 내전과 기아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현실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 대해 델런트 김해자 씨가 자조적으로 한 말이다.

지난해 2월 시작되어 지금까지 3만 명 이상 '인간'의 생명과 120만 명 이상 사람들의 소중한 거주지를 앗아간 수단 내전은 이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 지역에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아랍 민병대 잔자위드를 한달 안에 무장해제 시키지 않을 경우, 외교·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단 내전의 복잡한 정치경제학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그 기원을 둔다. 수단 지역을 식민화할 무렵 영국은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북부의 아랍부족과 남부의 기독교·토착신앙 부족을 하나의 통치령으로 통합해 분쟁의 싹을 심어 놓았으며, 이후에도 계속된 제국주의적 분리통치를 통해 이 두 집단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켰다.

195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정권을 잡은 북부의 이슬람 정부는 남서부 흑인들을 차별하여 이들이 사는 지역을 계속 낙후한 상태로 유지시켰고, 이 지역에서 발견된 석유와 우라늄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뿌리깊은 갈등의 화약고에 던져진 불꽃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2003년 2월 다르푸르 지역의 반군인 수단해방군(SLA)은 중앙정부의 차별 정책에 반발하여 독립을 주장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정부측은 아랍 민병대 잔자위드에게 막강한 화력을 지원해 수단해방군 등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국제앰네스티 등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의 후원을 받은 잔자위드가 다르푸르 지역에서 저지르고 있는 전쟁범죄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이들은 수단 공군의 도움을 받아 이 지역 곳곳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지역주민들을 한번에 수십, 수백 명씩 집단으로 학살하고 있으며, 강간을 전쟁무기화해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비인간화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서 만연한 콜레라와 이질로 인해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재난을 피하기 위해 이웃나라인 차드로 피난 중인 주민들 또한 매일 공격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으며, 부족한 지원 물품으로 인해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통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에서는 이에 대해 신중론을 펴기도 한다. 런던에서 발행되는 아랍계 신문 <알 쿠즈 알 아라비>는 "한달 안에 잔자위드를 무장해제 하지 않으면 수단 정부에 경제·외교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유엔의 결의는 아랍 국가들을 노리고 있는 미국과 서구의 또 다른 노력일 뿐이며, 미국은 이라크를 다뤘던 방식으로 수단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은 아프리카연합(AU) 등의 지역기구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국제앰네스티의 경우 유엔 결의안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지금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하고 본질적인 조치들을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립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의 여러 인권단체들은 수단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일컬어 '이 시대 최대의 인도주의 위기'라고 말한다. 이 위기의 해결을 위해 이제 '국민'이 아닌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기사 처음으로>

##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 구성

정치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동안 국가보안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열린우리당 내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크게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오는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내·외 활동 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이런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아래 시민모임)은 4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



추진 위원회'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강조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형법에 흡수하는 것은 또 다른 반 인권 독소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김승규 신임법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된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향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06일 (금)  
제 26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2. 장애인 고용 줄어야 장려금 주나
  3.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국방부
  4. 국내 인권단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 요구

##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 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성 평등과 소수자 보호 에 부합하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 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에 관한 규 정을 새롭게 정하며,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하고 있다. 새로이 신설된 가족에 관한 규정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 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여성단체들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부의 민법개정법률 안에 대해 반박했다. 4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가족의 범위를 혈연 중심으로 정하는 것은 비혈연가족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고 양성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성을 기본으로 따르지 않게 하여 부 혹은 모, 부모양성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개별입법 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도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 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 회 여성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연은 "우리사회의 강고한 부계혈통주의를 깨고 실질적 인 성 평등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 과 본을 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여연 이구경숙 정책부장은 "정부안은 여전히 성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다. 국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으 면 좋겠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의 개혁입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소개되어 왔으나,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자녀의 성과 본이 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따르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 했다. 호주제 폐지가 양성평등 실현과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 해서 국회는 정부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인권여성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때이다.

<기사 처음으로>

## 장애인 고용 줄어야 장려금 주나

장애인 단체, 정부예산확보 시급하다며 1인 시위

"사장님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있게 해달라구요. 그런데 사장님은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정부 보조금까지 깎아 버렸으니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자식이 일자리에선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체면도 무릎 쓰고 매달리고 또 매달려본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나가라'는 말뿐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내년부터 최고 4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절반 이상의 임금 삭감, 고용 기피, 해고 등의 피해가 장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 장려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기금이 고갈되었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간사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한다. "정부가 돈도 쓰지 않고 기업에서 받는 부담금만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장애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또 "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장애인 직업학교의 건립이나 운영비 등 방만한 기금 유용"도 기금의 고갈을 가져온 이유라고 말한다.

올해 고용촉진 기금을 보더라도 정부 예산이 30억 원인데 비해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걷는 '부담금'으로 모은 금액은 1000억 원에 이른다. 결국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많아져야 고용촉진 기금이 확보가 되고,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오 간사는 "정부가 일반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없던 예산까지 끌어오면서 장애인에게는 장려금을 축소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애여성공감 등 장애인 관련단체 29곳이 참여해 만든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는 5일부터 26일까지 정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축소 철회를 촉구하며 오전 11시 30부터 1시까지 1인 시위를 한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국방부

### 자이툰 부대 보도자제 요청의 진짜 이유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보도자제 요청'이 '실질적인 보도금지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자이툰부대가 이라크로 떠나기 전날인 2일 국방부는 각 언론사 편집국장 앞으로 남대연 대변인 명의의 서한을 보냈다. 국방부는 서한에서 "자이툰부대 장병들이 목격지에 도착해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이동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했다. 이어 "특히 부대전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체 언론에 비공개 된다는 점과 군 매체가 전개간 동행취재해 부대전개가 완료된 후 언론에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며 "부대정착 후에는 파병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위주로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3일자 '사고'를 통해 "이라크에 파병되는 자이툰부대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이 부대의 움직임에 대한 보도자제를 요청한 국방부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 외에도 중앙일보, YTN 등 대부분의 언론들은 국방부의 요청에 협조했다.

반면 CBS는 "국방부의 보도자제 요청이 '신보도 지침'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 2일 자이툰부대가 비공개로 진행한 환송식을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환송식 보도 이후 국방부 한 관계자는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합의한 보도유예(엠바고)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 "사고라도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며 CBS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그토록 우려하는 '사고'의 원인이 '파병' 자체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오히려 언론들이 나서서 파병의 부당함을 알리고 파병을 저지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일 수 있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파병을 반대해온 상황에서 파병에 대한 사실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1961년 미국의 '피그만 사태'는 전쟁보도에 있어서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은 미국 정부에 의해 훈련된 쿠바의 망명군을 쿠바 피그만에 상륙시켜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실패로 끝났고, 이후 언론과 국가이익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이끌어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침공사건의 시기 등 중요한 정보를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편집국장인 다니엘 씨는 '미국의 쿠바침공계획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자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니엘 씨는 "케네디 미 대통령도 만약 뉴욕타임스가 이 작전에 관한 사항들을 좀더 많이 보도했다라면 미국의 결정적 실수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국방부의 이번 '보도자제 요청'은 자이툰부대에 대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다는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강행을 비난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짙다. 더구나 "군 매체가 전개간 동행취재해 부대전개가 완료된 후 언론에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는 국방부의 태도는 벌써부터 이라크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언론 통제를 예상 가능하게 한다.

언론에 의해 베트남 전쟁의 추악함이 밝혀지면서, 미국 국민들은 전쟁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됐고 결국 엄청난 반전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이후 미국정부는 전쟁이 전쟁의 의에서는 '여론전쟁'의 성격 가진다는 것을 깨닫고 결드전을 '컴퓨터게임'처럼 보이게 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무마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국가가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전쟁의 추악함과 부당함을 은폐해도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무모한 시도일 뿐이다.

<기사 처음으로>

## 국내 인권단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 요구 이스라엘 샤론 총리에 서한 발송

새사회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34개 인권단체들은 5일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을 철거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과 유엔 총회의 결의를 수용하라고 이스라엘 샤론 총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차단하기 위하여 웨스트뱅크의 점령지를 따라 연장 700km의 장벽을 건설해 왔다. 이에 따라 웨스트뱅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옥과 토지가 파괴되거나 몰수되었다. 또 고용과 건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의존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리되어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중이 2005년까지 서로 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할 것을 계획한 평화 로드맵의 기본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분리장벽 철거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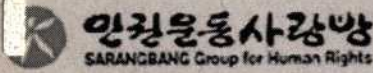
국제사법재판소는 7월 9일 분리장벽에 대해 "장벽의 건설이 점령지 거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팔레스타인 민중의 자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어 7월 20일 유엔총회 제10차 임시특별회의는 이스라엘에게 분리장벽을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167개국 중 150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07일 (토)  
제 26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안한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총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
2.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3. 영상으로 만나는 반핵투쟁과 주민자치의 힘
4.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 <논평> 총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

지난 1일 용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2명의 경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겁다. 힘든 조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잃은 경찰들의 심정도 이해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총기 규제 완화'로 비화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건이 어디 총기 규제가 까다로워 생긴 비극인가. 일선 경찰들도 돌발적인 공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총기가 있어도 피해를 막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평소 훈련을 강화하고, 방검복과 같이 경찰의 생명을 보호할 효율적인 호신품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하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묵과할 수 없다'와 같은 양갈음의 심정에서 규제를 푼다면 더 큰 위험을 불러들일 것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된다.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고 용의자의 목숨까지 빼앗은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던 15살 중학생이 총에 맞아 숨진 과거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이를 총기 '사고'라 부르지만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미흡하나마 총기 규제가 강화된 것은 이런 안타까운 희생들 때문이었다. 그 결과 98년 정점에 올랐던 경찰의 총기 사용이 99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래도 총기 남용으로 희생된 이들이 해마다 생겨났다. 2002년 강도를 잡으려던 시민이 강도로 오인돼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고, 지난달에도 달아나던 절도 용의자가 같은 일을 당했다. 지난 3월에는 경찰이 개인적 앙심으로 고향 선배 부부에게 권총을 발사해 1명을 죽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정년 규제를 완화해 총질이 넘쳐나는 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말인가.

경찰은 '대체무기 휴대'를 추진할 요량이다. 대체무기 역시 자칫 시민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무기임에 틀림없다.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충분한 사격 훈련과 안전수칙교육,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기사 처음으로>

##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17일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대책이 끝내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에서 무하마드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나비드 씨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결론이 났지만 주위 사람들은 나비드 씨의 상황이 "죽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나비드 씨의 사망을 발견한 파르비 아마드(파키스탄) 씨는 "나비드 씨는 해고된 상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나비드 씨는 사망하기 전날에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실업을 걱정하며 "임금이 적더라도 일자리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드러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나비드 씨가 사망한 방에서 발견된 신경통약, 진통제, 수면제 등과 같은 일련의 약들은 나비드 씨의 심리적 부담이 어떠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내 보



이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 체류' 상태가 되어 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그 해 4월초에 입국한 나비드 씨는 일주일의 차이로 '불법'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4개월 동안 미등록상태로 공장에서 근무를 해왔고, 2주 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나비드 씨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위주'에서 '불법 고용주 중심'으로 단속 방향을 바꾼 후 나비드 씨와 같이 해고되는 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몰리도록 형벌을 강화했고, 대대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민신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비드 씨가 일하던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인근에서 강제단속이 실시돼 (해고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며 "해고당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미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7월 23일 성명을 통해 "단속 추방의 두려움 속에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의 반복이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단속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본국에 있는 부인과 다섯 명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브로커에게 진 빚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나비드 씨에게 해고는 '강제출국' 선고였다. '아시아의 친구들' 정국희 교육팀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들에게 진 빚이 여전히 남은 상태에서 해고되어, 돌아갈 비행기표도 사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며 "법무부와 노동부의 단속 강화 조치 이후 해고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걱정했다.

4백여 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례비용이 아직 빚도 다 갚지 못하고 죽은 나비드 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살아서 강제단속과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은 죽어서도 장례비용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다.

<후원모금>

농협 171337-51-02774 PARVIZ AHMAD(파르비 아마드)

<기사 처음으로>

## 영상으로 만나는 반핵투쟁과 주민자치의 힘

부안 영화제, 12일부터 3일간 열려

반핵 투쟁과 주민 자치의 상징적 공간인 부안에서 영상을 매개로 한 또 다른 축제가 열린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안초등학교와 반핵민주광장, 격포항 등지에서 2004부안영화제(<http://www.baff.or.kr>)가 개최된다. '생명문화를 보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열리는 이번 부안 영화제는 새만금 간척 사업과 핵폐기장 유치 시도를 겪었던 경험을 발판으로 시작했다. 국내의 2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생태-환경', '핵폐기장투', '직접 민주주의' 등 부안의 어제와 오늘을 성찰할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부안 지역을 넘어서 진행 중인 '다른 운동의 세계'를 향한 시선들을 느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부안의 인구가 7만 명이 채 되지 않고, 변변한 극장 하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안에서 영화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의아스럽게 여기는 반응들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영화제는 부안에서 반핵 투쟁을 거치면서 성숙된 주민 자치의 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작년 하반기 '반핵민주광장'에서 연일 계속되던 촛불시위 행사 중, 부안 주민들의 투쟁을 고스란히 재현한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상영되었다. 삼보일배, 고속도로 점거투쟁, 상경 투쟁 등 고되고 뜨겁게 싸웠던 순간들을 커다란 스크린 앞에서 함께 공유했던 경험은 부안 주민들이 영화를 좀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작년 말 반핵대책위 내에는 영상팀이 꾸려졌고, 영상 제작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이렇게 구성된 영상팀의 활동을 자양분으로 준비가 시작된 부안 영화제는 그 성과를 '주민섹션'에서 상영한다.

그러나 영화제가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다. 지난 6월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주민공공문화기반시설인 '부안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예술회관운영규제 제7조 중 5항(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들어 부안예술회관의 사용을 불허하면서 사전검열 시비가 일고 있다. 더욱이 '상영될 영화내용을 알아야만 결정할 수 있다'는 부안군 문화관광과장의 말은 부안군이 부안영화제를 사전 검열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전주지법에 '부안예술회관시설사용불허처분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여전히 계속되는 부안군의 방해와 열악한 조건 속에도 '환경-생태-생명-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부안 영화제가 주민자치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광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lt;기사 처음으로&gt;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최근 한나라당 대변인브리핑에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체성과 간첩'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7월 의문사위의 비전향 장기수 옥사 관련 민주화 인정결정으로 시작된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 시비가 조사관 전력 시비로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권의 고무한 색깔 시비를 언론들은 지루한 암송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선정적이고 소모적인 색깔 시비가 중단되기를 바라며, 5일 의문사위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 '간첩전력'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의문사위는 "문제삼는 간첩전력이란 93년 공안기구가 발표한 '남매간첩' 사건으로 당시 안기부가 프락치를 이용해 만든 조작간첩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문사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축소되는 시기에 맞추어 간첩사건을 터뜨려 안기부의 존재 의의를 부각시키고, 권한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홍용을 프락치로 삼아 공작을 하고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사정권 하에서 슬하계 제기되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조의혹도 공안기구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남매간첩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관 전력 시비의 한 당사자이며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의 피해자 김삼석 씨는 "의문사위를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것은 시대착오이고, 3기 의문사위의 제출범을 막고자 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청산의 핵심은 박정희 유신정권에 있다"며 "과거가 두려운 그들이 의문사를 흔들고 유족들의 마음을 후비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93년 안기부에서 조사 받을 당시 강압적인 자백강요에 저항하며 자해까지 시도한 고통스런 기억을 갖고 있다. 강압적인 공안기구가 자행한 비인도적인 대우 속에서 간첩으로 조작된 김 씨의 '과거전력'은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주요 과거청산의 과제이다.

권한이 강화된 독립적인 3기 의문사위의 출범은 시대흐름이다. 한나라당과 일부언론은 '조작된 간첩전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lt;기사 처음으로&gt;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10일 (화)

제 26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민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2.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3.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4. 주간인권총론 (2004년 8월 2일 ~ 2004년 8월 9일)
5. <나비드 씨 후원 모금 다시 공지합니다>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1078중대 규탄 기자회견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2차 가해로 번져나가, 피해자와 증인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던 시위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78중대원이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목격자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1078 중대와 인근 경찰들에게 성폭력 문제를 규명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력 사건 처리에 무지한 면모를 드러내며, 증인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2004년 8월 5일자 인권하루소식 참조)

그런데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현장 동영상과 기사 등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피해자와 증인자가 소속된 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글들로 얼룩지고 있다.

성폭력 사건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던 증인자 A씨는 보도 이후 신원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의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소속 학교와 단과대학교 홈페이지, 개인 미니 홈페이지 등에 욕설을 퍼붓는 험박성 글들이 쇄도한다"며, "마음이 아프고 화가 많이 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게시판의 글들 중 다수가 가해자로 지목된 전경들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데, 왜 피해자와 증인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2차 가해성이 짙은 글들을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을 갖게 될지 두렵다"고 전했다.

성폭력 사건 현장들 기사 및 영상으로 취재한 '미디어 참세상'(아래 참세상)도 보도가 나간 후, 독자의견란에 "경찰들이 그런 못생긴 여자 몸을 만지고 싶었겠느냐", "여자를 시위대에 끼워 넣는 이유가 일부러 성폭력을 유발하려는 의도이지 않느냐"는 등 피해자와 여성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글들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현재 '참세상'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 한해 독자의견란을 잠정 폐쇄한 상태이다.

반성폭력 활동가인 시타 씨는 "성폭력을 둘러싼 다수의 통념이 가해자의 감성으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도 여성의 외모나 품행 등이 거론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일파만파 확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명성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문화가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덜 묻기 때문에 현행법상 수용되지 않는 폭력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또 획일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군대나 경찰 같은 조직 역시 의명성이 보장된다"며 "성폭력을 집단적으로 지지해 줄 가능성이 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무감각해지기 쉽다"고 진단했다.

한편 9일 오전, '전국학생투쟁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여성의 경험을 중시하지 않는 1078 중대를 규탄"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제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9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리며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조작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며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해설서에는 국보법 재개정사부터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폐지론에 대한 반론, 개정론, 대체입법론 비판 등과 함께 각 조문별 적용사례가 실려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정당 의원들이 참석해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나누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면 합법이고 문익환 목사가 만나면 처벌대상"이라며 국보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악용해 되어 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17대 국회가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며 "당을 뛰어넘어 이를 위한 의원들의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당내에서 100여명 정도의 의원들이 폐지를 위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에 열우당의 당론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열우당내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종걸 의원 등 개정론자들은 완전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변 백승헌 변호사는 "열우당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당론의 윤곽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인 의지라는 것은 말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대체입법인 가칭 '민주질서수호법'을 주장해 참석자들의 비난을 샀다. 민주법연 이창호 회장은 "(민주질서수호법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은 이미 형법으로 존재한다. 개정이나 대체입법론은 존치론의 변종에 다름 아니"라고 일축했다.

<기사 처음으로>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장이라면...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장이라면..." 물론 이러한 가정은 성립할 수 없을지 모른다. 검찰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로 일했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변협 회장 등을 역임한 후, 한 나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고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장을 맡은 지 벌써 4년째인 인물 김창국. 그의 경력과 시야를 이제 인권현장에서 활동을 한 지 4년째인 풋내기 젊은 활동가가 어찌 꿈이라도 꿀 수 있으랴! 하지만 나는 감히 그에게 인권의 이름으로 좀더 검허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싶다.

김창국 위원장은 지난달 1일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에 릴레이 체험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최저생계비로 실제 한 달을 살아가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하고, 이를 올해 정부의 최저생계비 실제 계측 과정에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킨다는 취지로,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공동 기획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날 하루 체험 후 빈곤 문제를 '복지'가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자신의 소감을 피력했다. 시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코 새삼스럽지 않은 김 위원장의 소감에 나는 버럭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빈곤 문제에 대해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빈곤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 차원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바로 인권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김 위원장은 빈곤 문제도 인권 문제라고 주장하거나 혼계하기에 앞서, 인권위의 장으로서 지금까지 인권위가 빈곤 문제를 소홀히 다뤄 왔던 사실을 먼저 반성해야 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와 빈곤 문제는 때려야 뭉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사회권의 침해에 맞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 차별의 대명사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지난해 초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테스크포스팀의 활동은 1년 만에 지난 현재 호지부지된 상태다. 사회권의 총체적 후퇴를 물고 올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지난해 누차 정책 권고를 요청했지만, 인권위는 조사 계획조차 없다고 한다. 빈곤 관련 실태조사가 최근 마무리됐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정책 권고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 반성이 결여된 채 당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장이라면..." 지금까지 인권위가 사회권 침해의 문제를 계속 후순위로 미뤄왔던 원인을 진단하고 내적 쇄신부터 단행함으로써, 빈곤 체험에 대한 소감을 대신했을 것이다. '빈곤 문제를 인권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고전적인 주장은 인권위, 더 나아가 김 위원장 스스로에게 더욱 절실한 명제가 아닌가 싶다.

©범용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2일 ~ 2004년 8월 9일)

### 1. 정부, 비공개 파병 강행 ... 각계 단식농성, 삭발 이어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소속 500여 명, 경기도 광주 자이툰 부대 앞에서 파병 강행 강력 규탄/ 불교인권위원회, 반전평화기독교연대 등 4대 종교단체 청와대 앞에서 파병 반대 집회(8.2)/ 자이툰 부대 1진, 이라크로 비공개 파병/ 국방부, 각 언론사 편집국장 앞으로 서한 보내 부대이동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언론 보도 자체 요구/ 국민행동, 청와대 인근에서 '망국적 파병강행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철군 요구(8.3)/ '평화를 여는 가톨릭청년' 안원영 대표 삭발, 천주교인권연대 김재복 수사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등 각계 인사 삭발·단식 농성 이어져(8.4)

### 2. 파병반대·철군요구에 폭력으로 맞서는 경찰

전국학생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 후 벌어진 몸싸움 중 여학생이 서울지방경찰청 1078중대 중대원에게 방패 틈새로 거둬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8.3)/ 성폭력 피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가해 잇따라/ 민노당, 이라크 추가파병 규탄 집회에서 경찰의 방패로 맞아 실신한 이영순 의원의 부상과 관련 "경찰이 폭력 진압한 결과"라며 정부에 사과 요구(8.4)/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1078중대 성폭력 사건을 규탄,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8.9)

### 3. 기타

노동위원회, "직원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방송사의 취업규칙은 정당법에 위배"된 다며 판정 내려/ 청소년 20여명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총선 공약 만 18살 선거권을 보장하라'며 집회 열어(8.5)

<기사 처음으로>

## <나비드 씨 후원 모금 다시 공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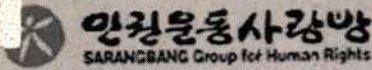
의환은행 341-18-13094-6 (예금주 차미경)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11일 (수)

제 26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하루소식  
하 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2. ▷ 즐거운 물구나무 ◀ 감시카메라 있어 너 안전하니?
3.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 폐지'
4.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20여 일 동안 파업을 지속한 엘지정유노조가 현장복귀를 선언했으나 사측이 공권력을 동원, 노동자들의 복귀를 방해하고 있어 '노조 죽이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 파업에 돌입한 후 서울에서 '산개투쟁'을 벌이던 엘지정유노조는 6일 현장복귀를 선언, 9일부터 출근을 시도했으나 사측이 회사의 정문을 걸어잠근 채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실 대화를 선언하며 현장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마저 막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조합원 현장 복귀 통보에 대한 회사의 입장'에서 "집단적인 근무지 복귀는 무의미하며 개인인의 복귀의사 표명이 있어야만 한다"며 "개별적으로 (복귀신청서를 통해) 업무 복귀를 신청한 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각자의 집에서 대기'할 것을 공지했다. 하지만 노조는 "복귀 신청서에는 복귀 신청 후 회사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하고 있어 전환 배치, 근무지 이동, 장기간 유급휴가, 사퇴 중용까지도 예상된다"며 "노조를 말살하려는 계획"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2년 발전노조 파업의 경우에도 사측은 파업 이후 복귀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태업, 절거 등의 행위'와 '일체의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이의 없이 배상할 것'을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서약서가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파업권을 포기하는 각서와 같다"며 "이는 노조 활동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굴욕감과 자괴감을 주며 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지정유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40시간 노동제 실시를 통한 신규인력 창출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지하철 캐드 연대 파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엘지정유 노사갈등이 직권중재에 회부되면서 노조의 파업은 이내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러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노조는 여수를 떠나 서울에서 '산개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파업 20여 일이 지나면서 김정곤 노조위원장 등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1명이 구속됐고, 노조원 65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게다가 '귀족노조의 배부른 파업'이라는 정부와 언론의 사실 왜곡이 이어짐에 따라 여론에 밀려 노조는 결국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노조는 "자본금보다 몇 배 많은 수익을 빼가는 외국자본에 대항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산업공해의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자는 요구"가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쟁으로 매도되고 직권중재의 멍에 걸려 불법으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회사인 칼텍스를 포함해 엘지정유 주식의 50%를 가진 대주주는 현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콘돌리자 라이스가 이사로 있으며, 이라크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계 석유기업 '세브론 텍사코'이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엘지칼텍스정유 이익배당을 통해 세브론 텍사코로 유출된 자금은 3천 억원에 달한다. 또한 매출이 55% 증가한 데 반해 생산직 노동자는 단 2명만이 채용됐을 뿐이다.

계약직과 외주용역비는 꾸준히 늘어나 현재 엘지칼텍스정유 공장 안에는 약 600여 명의 비정규직이 있고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1/3 정도라고 노조는 밝혔다.

한편, 회사는 조합원들의 복귀를 중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언론 홍보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운영해왔다.



<기사 처음으로>

## ▷ 즐거운 물구나무 ◀ 감시카메라 있어 너 안전하다?

얼마 전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겼다. 새로 생긴 역이라 깨끗하고, 집 가까이 있어서 자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 편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나타나는 감시카메라가 역 입구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나를 따라오기 때문이다. 까만 모자를 쓴 그녀석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면서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엘리베이터, 골목골목, 놀이터, 은행 등 이미 생활 곳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감시카메라는 무수히 많다.

'저 녀석은 너를 위한 것이야 너를, 우리 모두를 위협에 빠뜨릴지 모르는 테러, 혹은 여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카메라야. 저 녀석 덕에 늦은 시간에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괜한데 신경 쓰지 말라구'

그렇다. 내가 발생을 부리지 않는 한 녀석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녀석은 그저 카메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아가 치민다. 그것은 단지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코를 후비거나, 애인과 애정행각을 벌일 수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정말 테러나 강간, 살해를 계획하고 있어서 눈이 방해가 되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나의 허락 없이 나에게 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이며, 감시카메라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범죄 예방만을 위해 녀석이 쓰이고 있는지 여전히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시카메라가 '나의 생활을 드러낼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만큼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몇 년 전 현금 카드를 잃어버렸던 친구는 범인이 카메라가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돈을 빼갔음에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범죄가 감시카메라를 피해 일어날 수 있으며,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강남의 어느 동네는 골목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큰 효과를 보았으며, 한 대의 감시카메라가 열 명의 경찰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효과'라는 것이 감시카메라 덕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결국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라는 여전히 증명되지도 않은 이유로 프라이버시는 무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감시카메라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국에 감시카메라를 달자고 할 걸 그랬다. 이왕 다는 거 가정에도 달아서 가정폭력도 줄이고, 혹시 범죄자가 찍힌 필름에 조연으로 출연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 때 창피하지 않게 바르게 생활하라고 할 걸 그랬다.

<기사 처음으로>

##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 폐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재발족 ... 청원운동, 거리문화제 등 계획 밝혀

301개 시민·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올해 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 힘찬 재출발을 선언했다. 국민연대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사업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연대 고문 함세웅 신부는 "지난 40년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 중 90% 이상이 7조 '찬양·고무'가 적용되었다는 국가인권위 조사는 국가보안법이 막걸리 보안법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른바 '패션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양심이 대상이며 정권의 유지가 목적인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악법"이라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7월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망하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참여를 모아내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을 전개,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국회의원 정족수의 과반수를 넘는 151명 국가보안법폐지 국회의원 만들기 운동'을 진행하여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실제로 상정될 수 있도록 개입할 예정이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사회 여론화하기 위해 대중집회,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 '월 1회 거리 문화제'를 펼친다.

그 외에도 국민연대는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는 전국도보행진 △국가보안법폐지 창작 콘서트 및 각종 문화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 대토론회 △국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 조성 활동 등을 준비중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행사 후 대학로까지 행진을 한 후 마로니에 공원 등에서 100만인 청원운동을 벌였다. 국민연대는 전국도보행진단이 서울에 올라오는 9월 5일 대규모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연대는 2000년 7월 발족한 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드세진 올해 활동을 재개하여 재발족에 이르렀다.

<기사 처음으로>

##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최근 경찰이 수사편의를 빌미로 범죄 용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켜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의 미비한 인권의식이 다시금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살해용의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한 3만 여장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같은 날 오후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모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가입을 위해 등록되자,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한 경찰은 병력 200여 명을 투입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포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 초등학교생이 전단지에 나온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용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배전단에 실음으로써 용의자 검거가 가능하다는 발상은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개인정보이며, 집적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부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관리, 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은 물론,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지역까지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의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도 한다. 박김형준 활동가는 "국내 사이트들의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알면 가입이 가능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정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에서 번호가 한번 유출되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양산될 수 있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21조 9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자'에 한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개개인에게 돌아갈 손실을 재산상 피해로 국한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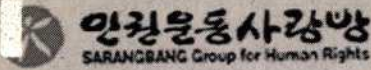
10일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등 11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죄로 인해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민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12일 (목)

제 26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 하 루 소 식  
하 루 소 식 자 세 히 찾 기  
하 루 소 식 주 제 별 찾 기  
만 화 사 랑 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2.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3. 성 소수자에게 나침반이 되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폭력으로 화답

비민주적인 운영과 관장의 연임 문제로 불거진 정립회관 점거 농성이 50일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회관측, 폭력으로 일관

지난달 22일에 이어 10일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정립회관 직원들이 쇠파이프와 해머를 들고 농성장에 난입, 이를 막으려는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유리창과 문 등을 부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에는 서울·경인지역의 '곰두리 봉사회' 소속 100여명이 경찰의 저지로 농성장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사무실을 향해 돌을 던지며 위협을 하더니 급기야 전기를 끊고 음식물 반입까지 차단했다. 심지어 농성에 참가하려던 전국자 동차운전학원노조원 4명을 집단 폭행하는 등 회관측이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전동휠체어 반납 강요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최진영 씨는 2년 전 정립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난 후 자립 생활을 꿈꾸게 됐다. 하지만 회관측이 농성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했던 활동 보조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동 휠체어를 반납하라고 강요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함께 농성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임은영 씨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에게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처음으로 자립생활을 보급한 곳에서 이렇게 비겁하고 악랄하게 나올 수 있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처음 농성을 할 때에는 차라리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만두는 것은 관장의 폭력에 지는 꼴"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관장 연임 철회, 장애인·노조 참여 보장

국내 최초의 장애인 이용 시설로 1975년 설립된 정립회관은 2000년에 들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보조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이완수 관장이 정년퇴임을 10여일 앞두고 이사회를 통해 정년제를 임기제로 바꿔, 지난 11년 동안의 장기 재직에 이어 또다시 2년 연임을 결정하면서 노조와 회관간에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6월 22일 정립회관 노조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 소속 70여명이 사무실 2층을 점거하고 관장의 연임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경인노조 김재원 정립회관 지부장은 "정립회관은 한 개인이나 이사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엄연히 국가로부터 받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며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의 시설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명하복'식의 운영 관행과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이 무시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운영을 위해 노조와 시설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립회관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가 민간위탁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지면 폐쇄적 운영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7년간의 긴 싸움



끝에 2003년 6월에야 비로소 정상화가 시작된 에바다복지회는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과 시설의 촉박·세습화가 시설 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퇴관측은 연임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농성을 하고 있는 노조원 4명을 해고, 다른 4명에게 징계를 내린 상태이다.

<기사 처음으로>

##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되

검찰이 미아에 대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디비)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검찰이 강력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디비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들의 범죄예방 및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이들의 유전자정보 중 일부를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방안을 재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94년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가 인권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11일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김종철 과장은 "유영철 씨 사건을 계기로 과학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유전자정보 수집에 있어서 수형자, 수사중인 피의자 등 범위와 대상에 대한 쟁점은 검토 중이며, 관련 법제정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과장은 "강력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디비 구축으로 범죄가 예방되고, 재범률이 감소하며, 범인에 대한 조기 검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재범율을 낮춰, 강력사건의 경우 과학수사를 근거로, 유전자디비 구축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유전자디비 추진 방침에 대해 '범죄인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과학수사를 앞세운 수사편의주의'라고 반박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는 "강력범죄자에 국한해서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유전자디비를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며 "범죄가 예방되고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유전자디비를 만들 것이 아니라 감옥수용자가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재활교육과 적응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간사는 유전자디비 구축으로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수사효율이라는 명분 하에 범죄자의 생체정보를 국가가 집적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제도라는 강력한 감시체계를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개인의 유전자정보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에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한결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간사는 "검찰이 만들고자 하는 유전자디비에는 감옥수용자와 강력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유전자정보가 축적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애초 검찰이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영국의 경우 1995년 처음 유전자디비를 구축할 당시, 입력대상자를 성폭력범으로 제한했다가 이후 살인, 강도, 차량절도와 같은 범죄까지 확대해온 사례가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지선 간사는 "검찰이 또다시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검찰의 추진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도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빌미로 유전자디비를 만들겠다는 것은 검찰의 욕심"이라고 비판하며 "지금은 민생치안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 성 소수자에게 나침반이 되길

### 끼리끼리 상담사례집 발간

성소수자 여성을 위한 상담 사업을 십여 년 간 진행해 온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아래 끼리끼리)'가 지난 상담을 바탕으로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성소수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거나 올바른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사례집은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성소수자에게 나침반이 되기에 충분하다.

끼리끼리 간사 케이 씨는 "성소수자가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보면서 위안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사례를 정리했다"며 "이런 상담 사례집이 발간된 경우가 많지 않은 만큼 성소수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집의 중심은 '상담 및 내담 사례'로, 끼리끼리가 최근 4년 동안 진행한 상담 사례를 △청소년 △성 정체성 △커밍아웃 및 대인관계 △폭력범죄 등의 항목별로 분류,



소개하고 있다. 상담 사례로 실린 상담자들의 질문 하나 하나는 성소수자가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담아내며, 여기에 끼리끼리가 경험과 애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답변이 이어져 있다. 상담으로 제기되는 질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답변들은 '사회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어, 성소수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들이 사회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례집의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들은 사례집의 주 대상인 상담자와 성소수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 성소수자를 둔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된다.

이 밖에도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에는 성소수자에 관한 용어 설명, 상담스킬,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홈페이지 소개, 성소수자에 관해 참고할만한 책이나 영화 등 출판·영상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인 | 인권운동연구소

### 인권하루소식

일간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13일 (금)

제 26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2.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3.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4. '국민소환' 발미로 차베스 정권 공격받아

##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검문 이유가 뭐니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심검문이 아니라 '직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을 지목한 것이 불쾌해서 시민은 다시 묻는다.

"무슨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글쎄 신고가 들어왔으니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경찰이 검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자 시민은 검문을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시민을 연행하려 했다. 화들짝 놀란 시민은 "내가 뭘 잘못해서 끌고 가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강제로 시민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12일 경찰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찰의 불법행위가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시 저동 수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이 경찰의 수사권주의의이며, 경찰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을 통해 "최근 강력사건의 발생을 기회 삼아 '경찰 주도하의 통제사회'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인권 존중의 방향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 완화에 반대하며 "안전한 대안장비를 구비하고, 경찰 내에서 충분한 사격 훈련과 안전수칙교육,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도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경찰이 자신들의 권한만을 강화시키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등은 실제로 강제 연행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강력범죄가 불심검문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 처음>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펴낸 곳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154쪽/2004년 8월/2000원

모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재정



비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올해를 국가보안법 폐지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이나 형법으로의 통합, 대체입법 등 국가보안법의 명맥을 이으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추악한 역사와 폐해를 고발하는 이 해설서는 격론이 오가는 동안 방향을 잃지 않게 할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단호한 결론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이 해설서는 국가보안법의 △역사 △법률적 문제점 △폐해 △폐지 반대론에 대한 비판 △조문별 적용 사례 △외국 입법례 등을 담고 있다.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1948년 혼란을 틈타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세기 넘게 '정권안보법', '사상처벌법'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책에 실린 조문별 적용 사례는 이 법이 얼마나 어이없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이상마저 짓눌러왔는지를 알게 해준다.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전달만 하면 '국가기밀 누설'이고, 북한의 우표를 구입해 보관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찬양·고무'라는 식이다.

해설서는 또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대한 비판 논거들을 충실히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 외국에도 유사법률이 있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다. 독일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대치해 있고 오랫동안 계엄상태에 있었던 대만에서조차 유사 법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록에는 최근까지의 관련 통계와 법원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선고된 주요 도서목록이 소개돼 있다. 교사를 꾸꾸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보았을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마저 이적표현물 대열에 거론(?) 포함됐다.

법조인들이 쓴 탓인지 몇몇 어려운 표현들이 여과없이 사용되고 있는 점은 옥에 티다. 구입문의는 민변 사무실(02-522-7284)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 처음으로>

##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 미국, 시아파에 대한 총공세로 나자프 중심지 장악

지난 6월 미국에 의해 세워진 이라크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시아파 반군에 대해 미국이 나자프와 이라크 남부 곳곳에서 공세를 펼쳐 수많은 이라크인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장행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한 미 해병대는 12일 시아파 강경 지도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를 따르는 메흐디군에 대한 총공세를 통해 나자프시의 중심지를 장악했다. 미군은 나자프에서 메흐디군과 맞선 지난 일주일간의 전투에서 360여 명의 메흐디군을 죽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라크 시아파의 성지 중 하나인 이맘 알리의 성지가 있는 나자프는 미군의 총공세에 의해 성지가 파괴되고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다쳤다. 이라크 보건부는 쿠트의 남동지역에서 발생한 전투로 적어도 72명의 이라크인이 죽었고, 사드르시티에서는 7일 하루 동안 22명 이상 죽었다고 밝혔다. 시아파의 '총봉기'를 통해 이라크 상황은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되었지만, 메흐디군과 미군은 서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WSWS(세계사회주의자웹사이트)는 "공격의 목표가 메흐디군을 제거하기 위한 것뿐 만 아니라 지난 6월 미군으로부터 주권을 이양 받은 이라크 임시정부를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인 이 야드 알라위는 "5일 '사드르를 숨기고자 했던 무법자들과 장패들'에 의해 나자프 경찰서가 공격당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에게 공격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미군도 "나자프를 공격한 것은 알라위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군의 나자프 총공세의 배경에는 알라위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반발과 더불어 시아파 봉기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드르가 시아파에게 항전을 요구한 이후 시아파 봉기는 급진화되었고, 메흐디군은 사드르시티, 나자프, 바스라 등 이라크 남부에서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라크 내 여론조사에 의하면, 임시정부에 저항적인 성직자에 대한 지지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반면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WSWS는 "미국이 지정한 '정부'는 오직 바그다드의 일부 지역만을 통치하고 있고 심지어 의회와 공무원들은 테러를 당하거나 암살된다. 사마라, 팔투자, 라마디 등의 지역은 모두 임시정부의 통치 밖에 있다"는 영국 언론인 로버트 피스트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메흐디군 당국자 알 바스리는 "미군이 나자프를 공격하면 이라크 남부에 있는 송유관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중전 후 이라크 재건을 돕겠다'며 한국군이 파병돼있는 이라크 정국은 더욱더 혼미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국민소환' 빌미로 차베스 정권 공격발아



민중의 힘으로 성립·유지된 정부를 '국민소환'의 이름을 내걸고 위협하는 일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5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남미 최대의 산유국이지만 국민 80%가 빈곤에 허덕였던 절망의 땅에서, 1998년 차베스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염증과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차베스 정권은 그간 토지 재분배, 실업 퇴치, 교육권과 건강권의 확장 등 일련의 사회 개혁을 꾸준히 시행하여 경제적 소외 계층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왔다.

반면 미국 정부의 비호 아래 베네수엘라 내 자본가 계급, 보수정치세력, 관료화된 노동조합과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반차베스 담합을 구축, 지난 2002년 4월 쿠데타 시도와 12월 국영석유회사의 관리자들이 주도한 파업을 통해 차베스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번 국민소환투표 역시 보수 세력들이 차베스 정권에 퍼붓는 공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반차베스 세력은 유권자 20%의 청원을 통해 대통령 국민소환이 가능하다는 '볼리바르 헌법'을 이용, 부유층 등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냈다. 그렇지만 이중 상당수가 무효표로 밝혀져 반차베스 세력이 국민소환투표를 정치적으로 수단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뒤로 한 채 선관위는, 결국 오는 15일 소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의 힘'의 원영수 씨는 "끊임 없이 정권 탈취를 기도했던 세력들이 민주적 헌법을 이용한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씨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아 국민소환투표는 부결될 것"이지만 "소환투표 자체의 결과와 무관하게 소환투표를 전후로 무력재동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미국 내 석유 수입국의 4위를 차지하는데, 차베스 정권이 미국의 이해관계를 따르는 현 국영석유회사를 자국 민중들의 뜻에 맞게 재편하려고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원씨는 더욱이 "올 초에 세상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쓴 사이에 무너진 아이티 정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미에 위치한 흑인공화국 아이티의 이라스티드 대통령은 자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종한 쿠데타에 의해 축출된 바 있다. 수십 년 동안 남미를 자국의 텃밭 취급하며 정치·경제적 봉쇄를 해왔던 미국의 어두운 역사와 차베스 정권이 무장한 세계화를 주도하는 현 미국 정부에 대항하는 극소수의 정권임을 유념할 때, 아이티의 '악몽'이 능히 베네수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씨는 "국민소환투표가 부결될 시 차베스 정권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지만 세계적인 거대 보수 언론들이 제시하는 왜곡된 보도만을 접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립되어 싸우고 있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에 대한 관심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14일 (토)

제 26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민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2.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3. 파업노동자 현장 복귀 방해하는 열지정유
4. '여성들이여, 발길을 되찾자'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지난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은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불심검문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에는 불특정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영장주의를 비롯한 형사법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법 불심검문 방법인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와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경찰관리부집행법을 개정하여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소지품 검사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검문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여기에는 경찰의 권한 강화 외에 국민의 기본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게 한다.

애매모호한 법 규정을 추가하여 총기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대책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훈련도 없이 인질범이나 흉악범들을 대처해왔음을 경찰이 스스로 고백하는 한심한 작태도 보여주고 있다. 이제라도 문제를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총기는 다른 장비와는 달리 인명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화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에 의존하여 범인을 제압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이번 종합대책 중에는 언론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도 있다. 사생활의 광범위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CCTV 설치를 아무런 제한 규정도 없이 무한정 확대하겠다는 것은 CCTV를 통해 전 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도 그렇다. 그 동안 경찰이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에도 공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남용되어온 점은 간과된 채 강력한 처벌 의지만을 앞세우고 있어 앞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경찰청이 제시한 종합대책에는 인권은 무시되고, 경찰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나라가 경찰국가로 가야 한다면 몰라도 민주화된 사회에서 인권에 기반하지 않은 경찰력 강화를 통한 공권력의 확립은 번지수가 한참이나 빗나간 것이다. 그러기에 경찰의 종합대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국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가 재차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의 대테러 조치와 유엔 대테러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0일 「국제적인 대테러 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접근법」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대테러 조치가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대테러위원회 활동

'9.11 테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테러활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결의 1373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테러행위에 가담했거나 그것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들에 대해 법적·행정·행정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엔은 결의 1373호의 내용을 각국 정부가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정부의 대테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테러위원회를 만들고, 최근에는 대테러집행이사회를 강화함으로써 대테러위원회를 보강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의 1373호로 각국 정부들이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2003년 결의 1456호를 제출했다. 결의 1456호는 모든 대테러 조치가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 난민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는 "대테러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대테러 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테러 활동을 막기 위한 조항들이 비폭력적이고 독립적인 이슬람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이용해, '해방당' 지지자 4천여 명을 포함 7천여 명이 구금됐다. 게다가 감옥 내 고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법원도 고문을 통해서 받아낸 자백을 주요한 증거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대테러 조치에 대응하는 법으로 유엔 대테러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수십년 동안 여당에 대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이용해 왔다. 또한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을 체포한 후 재판 없이 2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조사나 법적 절차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이집트, 모로코,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어 대테러 활동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또한 대테러위원회가 이러한 잘못된 사례들을 바로잡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휴먼라이츠워치는 대테러위원회 활동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대테러집행이사회에 제안했다. 특히 '인권전문가가 대테러집행이사회에 참가하고 정부 보고서를 비정부인권기구에도 보고함은 물론 각 국의 인권 문제가 대테러위원회에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 파업노동자 현장 복귀 방해하는 엘지정유

### 굴욕적인 면담·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등 노조 무력화

지난 11일 엘지정유노조는 '조합원 개별 복귀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으나 현장복귀를 시도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선복귀, 후대화' 방침을 밝혀왔고 이에 노조는 집단출근 투쟁을 접고 조합원에게 개별업무복귀를 결정했지만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해 극히 일부만을 복귀시키고, 대개는 면담 후 개별통지가 있을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는 통보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엘지정유노조 한 관계자는 "대개 조합원들은 면담과정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 팀장은 회사가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응징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회사 편에 설 것인가 노조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처리하겠다는 것을 고수하며 노조와는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일 민주노총 법원원은 "이러한 사측의 행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부당노동행위이며,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엘지정유가 노동자들의 사업장 출근을 막고 조합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 노동자들이 산개투쟁을 시작한 7월 20일부터 회사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한 채 조합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노조의 항의로 13일에 이르러서야 노조간부들만 사무실 출입이 허용된 상태이다. 그마저도 회사는 노조사무실 출입결찰을 바꿔 회사가 허용한 사람에게만 사원 신분증카드에 칩을 넣어 출입여부를 통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엘지정유는 9일 조합원들의 투쟁기금 8천여만 원과 노조간부 및 대의원, 조합원 등 35명에게 1인당 9천만 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오는 16일 법원이 손배가압류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손배가압류의 칼날을 다시금 엘지정유 노조 및 노동자에게 휘두를지 우려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